

남북협력기금·고용 예산 '뜨거운 감자'

막오른 470조 예산국회

당정 "성장엔진 만들 혁신예산"

한국당 "출산 관련 예산 증액"

원안 사수 vs 대폭 삭감 격돌

국회는 이번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나선다.

여야는 예산 심의를 앞두고 정부 예산안의 '원안 사수'와 '대폭 삭감' 입장을 각각 밝히며 살바 싸움을 해와 이번 주부터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동시다발로 격돌할 전망이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전체 470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에서 약 20조원을 삭감하고, 약 15조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조원가량 순삭감안을 제시한 것이다. 우선 외교통일위원회가 심사를 맡은 남

북협력기금이 한국당의 첫 번째 타깃이다. 정부는 내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올해보다 1385억원 증액한 1조977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특히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사업 등이 포함된 남북경제협력 프로그램 예산을 4732억원으로, 올해보다 1598억원 늘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이후를 대비했다. 또한 산림협력 등 민생협력지원(4513억원), 이산가족교류지원(336억원), 사회문화교류지원(205억원) 등의 예산도 일제히 증액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은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북한 핵폐기 로드맵도 나오지 않았는데 '대북 퍼주기'를 하려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고용 관련 예산도 뜨거운 감자다. 정부는 최악의 고용난 속에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총 23조4573억원으로, 올해의 19조2312억원보다 22% 늘려 사상 최대로 확

대 편성했다. 일자리 예산은 노인 등을 위한 직접 일자리 마련(3조7800억원), 직업훈련(1조9711억원), 청년구직활동지원 등 고용서비스(1조7055억원) 등의 예산으로 구성돼 있다. 육아휴직 급여 등 고용장려금(5조9204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창업지원(2조5741억원), 구직급여 등 실업소득 지원(8조1412억원) 등의 예산도 이에 속한다.

민주당은 공공 일자리 확대가 유례없는 고용 위기를 타개할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반해 한국당은 이른바 '단기 아르바이트용'으로 자체 분류한 8조원 규모의 예산을 몽땅이로 자르겠다고 버리고 있다. 대신 한국당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로 고용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예산심사를 앞두고 저출산 해소를 위한 복지 예산이 의외의 관심 포인트로 떠올랐다. 통상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 구호를 외치고 한국당이 이에 반대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한국당이 출산 장려를 화두로 던지며 총 7조원에 달하는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당은 임산부 30만명에게 200만원 상당의 카드와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소득 상위 10% 자녀를 제외했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전제로 확대하는 동시에 지급 상한 연령과 금액도 확대하는 방안을 지난 2일 제안했다.

민주당도 아동수당 100% 지급을 위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정국회 중점법안에 추가한 만큼 이와 관련한 여야 합의는 어렵지 않다. 모처럼 여야는 저출산 극복 태스크포스(TF) 구성에도 뜻을 모은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당의 출산 장려 제안은 애초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 9월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역설한 '출산주도성장'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민주당의 기존 저출산 해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4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인도 방문을 위해 공군 2호기에 오른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숙 여사 단독 인도 방문...공군 2호기 타고 출국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하기 위해 4일 출국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공군 2호기를 타고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하는 김 여사는 현지시간 5일 뉴델리에서 모디 총리를 면담하고 랍 나트 코빈드 대통령의 부인 초창오찬에 참석한다. 6일에는 아요디아에서 열리는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참석해 기념비에 헌화한 뒤 디왈리 축제 개막식과 점등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모디 총리는 인도의 대표적인 축제인 디왈리 축제를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식과 함께 치렀으로써 양국 협력과 역사를 기념하는 축제로 삼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청와대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 여사의 인도 방문에는 유송화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고민정 부대변인 등이 동행한다.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단독으로 외국을 방문하는 것은 지난 2002년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미국 뉴욕 방문에 이어 16년 만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당정청 "개혁·민생 법안 통과 긴밀 협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어 이번 정기국회에 문재인정부 경제민주화 정책의 성과가 담겼다고 보고 각종 개혁·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결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공정거래법·상법·유동산업발전법·상생협력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경제 개혁법안과 가맹점주, 소상공인 등과 밀접한 관련 있는 민생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여야 민생법안TF 마련도 검토하기로 했다"며 "쟁점법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민의 불안과 의혹이 없도록 면밀히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당정청은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비리 근절을 위한 3개 법안 통과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소득 하위 90%에게만 주던 아동소득을 100%로 전면 확대하는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홍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남북국회회담, 여야정 상설협의체 등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면서 "무엇보다 이번 정부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시한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날 연 총리가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인적쇄신 3대 기준...지지율·언론 노출·SNS 활동

당협위원장 심사에 활용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는 4일 국회의원 과 당 지지율 비교, 중앙언론 노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등을 '인적 쇄신 3대 기준'으로 마련, 당협위원장 심사에 이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심사는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기법을 동원해 당 기여도와 의정활동 등을

평가한다. 특정 정파에 의한 편파성 사비, 초선과 다선 의원 간 형평성 문제 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책임당원 숫자나 지역민 인터뷰를 통한 설문조사 등으로 당무 심사가 진행돼 결과가 나와도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비대위는 이달 중순까지 이러한 기준에 따라 당협별 평가 점수를 산출한 후 조직 강화특위와 함께 자격 심사를 벌일 방침이다. 12월 중순에는 교체 대상 당협위원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 지지율의 경우 지역별로 의원 지지율이 당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면 당 지지율에 대한 기여도가 낮다고 판단하고 감점할 방침이다. 특히 다선 의원의 경우는 가중치를 뒤 점수를 더욱 깎는다. 이를 위해 지역별 80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10개 여론조사 업체가 이미 설문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언론을 통

해 야당 의원으로서 정치·경제·외교·안보·사회 등 분야에서 현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얼마나 공헌했는지를 파악할 계획이다. 차기 총선 당선을 위해 지역구에 머물며 중앙 이슈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또 SNS를 통한 개별 의원의 활동 정도를 측정한다. 단순히 개인 지역구 행사 사진을 게재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얼마나 당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글을 올림으로써 반향을 불러일으켰는지를 파악한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5·18 3단체 개별 공법단체 전환 추진

장병완 의원 개정안 발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를 각각 공법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4·19민주혁명회 등 다른 유공자 단체와

달리 5월 3단체의 현재 법적 지위는 민법에 근거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무료로 사용할 수 없고 사업비·운영비 등도 국가에서 지원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5·18 보상 차원에서 건립된 기념문화센터에 입주해 있지만 임대료를 내고 있다.

5월 단체는 지난 10여년간 공법단체 전환을 추진해왔으나 정부는 3개 단체를 하나로 통합하라며 공법단체 지정을 미뤘다. /박지경 기자 jkpark@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구성 지연

지난 1일 임기가 끝난 김소영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자유한국당 때문에 지연되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을 제정했고, 문 대통령은 같은 달 16일 국회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된 지 약 20일이 지난, 4일 현재까지도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특위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과 달리 한국당이 아직도 인사청문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오는 6~7일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남겨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금주 중에는 특위가 구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지경 기자 jkpark@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본 부시도는 고적익 이행을 돕기 위해 제작하였으며,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New Square

- >> 이마트 에브리데이 입점확정
- >> 리빙코리아 입점확정
- >> 커피전문점 입점확정
- >> 네일아트, 속옷 매장 입점확정

용산타워

- >> 편의점, 돈까스전문점, 치킨오피스, 이동통신 등 업종 선입대 완료
- >> 멀티역세권, 교통망확보
- >> 2~4층 주차타워! 총 77대 확보

조은프라자

- >> 용산지구 리스빌 정문, 모아엘가 후문, 대성베르힐 정문 바로앞 상가
- >> 상가건물 3면 도로와 인접
- >> 상층부 상가건물의 희소성

봉선동 남부경찰서 바로 옆 용산지구 4,000여 배후세대 상권!!

300여평 초대형 이마트 에브리데이

분양 임대 **1899-8947**

시행 | (주)SB빌딩 | (주)성원 | (주)조은플러스
시공 | 기보종합건설